

사설

전사법 개정안 통과 '환영'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찰환경, 수행환경을 보호할 하나의 안전판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이를 요구해 왔던 불교계로서는 물론 이거니와, 민족문화의 중요한 요람인 사찰환경이 보호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함께 환영해야 할 일이다.

본지에서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거니와, 사찰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건축법 8조4항의 폐지는 미래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본말을 전도한 입법이었다. 개발논리와 개인소유권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민족의 재산인 문화재의 보고이며, 불교계의 보물로 그나마 온전하게 남아있는 자연환경인 사찰환경을 파괴하려 한 것은 문화의 시대, 환경의 시대를 예고하는 현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제 뒤늦게나마 그 보완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포가 되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된 불교계의 요구를 단순히 특정 종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불교계가 전통문화를 보호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하고 그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는 불교계대로 이번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하루 빨리 이 법이 건축법 시행령에 반영되게 해야 할 것이며, 중요한 사찰환경을 빼앗기지 않는 지역의 조례에 의해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례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허가시 반드시 해당 사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사찰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그동안 법이나 제도를 등한시하거나 잘 알지 못해 종종 피해를 당해왔던 불교계의 병폐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범 종단적으로 주도면밀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계의 움직임이 특정종교의 이익만을 꾀한다는 비난이 일지 않도록, 사찰 지역을 포함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를 바탕으로 하여, 사찰환경의 보호가 불교계 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온 국민의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화운동, 환경운동 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특히 중요한 것은 불교계 스스로가 사찰환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편승한 사례도 있었고, 불교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여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사찰환경 유지 정책을 펴 왔던 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정으로 사찰환경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그 보호에 불교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찰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환경과 복지 문제에 앞장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승단이 청정한 수행자의 공동체상을 보임으로써, 불교계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지역사회, 나아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온 국민이 사찰환경이야말로 자신들이 지닌 가장 중요한 보배로 느끼게 할 때 진정한 사찰 환경의 보호는 이루어진다. 이번의 입법은 그러한 일을 불교계가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여야 한다.

'불자장교 횡령했다'

허위사실 유포 빈번

김소장 선고 앞두고

돌연 공소장 변경신청

"진급하려면 계종을"

빼있는 농담 나돌아

군법당 건립되면

취임환영병회 사양

마지못해 몸사리기

軍 불자지휘관 수난시대 '국민의 정부' 말 뿐인가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자 지휘관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김태복 소장 사건의 여파로 군 불자 지휘관들이 군법당 건립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취임환영병회 등을 사양하는 등 군 지휘관들의 몸 사리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군법당 기공식을 최근에 마친 후 훈련소에서는 부대장이 불자에서 개신교인으로 바뀌자 법당 장소를 옮겨야겠다는 발언까지 하는 등 군불교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10월2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2심 심리가 종결되어 오는 21일 오후 4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태복 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위반 등 사건'에 대해 육군고등검찰부가 최근 변론재

개와 공소장변경허가를 재판부에 신청, 재판 사상 유례가 없는 6회에 걸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란 여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28사단 소속 김 모 중령과 이 모 준위는 00부대 전연대장 한승민 대령을 대상으로 한 '석림사 군법당 증축 및 일주군 건립비 횡령'에 관한 군사법기판의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재차 이를 보고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군내 종교편향사건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 위원장 현진섭(조계종 포교부장)은 9일 포교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복 소장 재판의 관찰관인 국방부장관은 지휘책임을 통감해 변호인단이 제기한 군법당의

증거조작, 증인 회유 등과 무려 6차례에 걸친 공소장 변경 그리고 군법당의 '조직 이기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진섭은 이날 '시주금 재판' 문제제기자로서 편향된 종교관을 가진 함 모 대령(개신교 신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김 소장에게 대한 조속한 선고공판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 이승규 종무관과 국방부 군종실장을 잇달아 면담한 뒤 "군법당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장관에게 보냈다.

한편 '군법당 석림사 증축 및 일주군 건립비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용일·일흥사 주지)는 최근 군 당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28사단 김 모 중령 등은 전 연대장 한승민 대령이 석

림사 증축과 일주군 건립비사 회사된 2천~3천만원을 횡령하고 인근 모 사찰 주지스님과 사찰가에서 외도행각을 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급부대에 보고해 불교 비방과 군불자 모함에 나서고 있다"며 "사건을 조작해 군기를 문란케 하고 있는 김 중령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성남 약사사 주지 해안스님은 "장성 진급을 눈앞에 둔, 타종교 활동도 공평하게 지원한 전임 부대장을 모함하는 개신교 장교들은 조직적으로 불자 지휘관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면서 "김영삼 정권 이래 자행된 군내 종교편향적 인사 등으로 장성이 되려면 개신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소문까지 공공연히 들린다"고 말했다.

"평등한 종교정책을 시행하겠다고던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자 장병에 대한 종교편향 사건이 줄어드는 대신 불자 지휘관을 통한 보이지 않는 종교탄압은 더욱 늘어나고 있어 불교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포교대상 시상-포교인의 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현)은 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포교대상 시상 및 포교인의 밤'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전법선언문 낭독, 사진으로 본 포교 40년 등 식전행사에 이어 진행된 포교대상 시상식은 포교원장 정현,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인사말·격려사에 이어 대상수상자인 금산사 주지 도영스님의 인사말,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의 축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포교인의 밤 행사는 가수 김태곤씨(포교대상 원력상 수상)의 축하와 불교출판협회(회장 원택)의 사찰 및 신원단체 불교도서관 건립을 위한 불교도서 기증식, 포교사단(단장 김기봉)의 종합학교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원심회 수화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한국불교사회복지 총람' 나왔다

교계운영 복지시설·단체 자세히 소개

교계의 복지현황과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집대성, 교계 복지정보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국불교사회복지총람>이 발간됐다.

조계종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가 14일 펴낸 총람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기관, 단체, 사찰, 복지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현황실態를 조사한 결과로, 총 1천3백20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이에 따라 복지정보의 효율적·효과적 서비스를 상호 확대하고, 불교적 특성을 살린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전문인력의 육성, 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실천체계 확립 및 건립한 정

보공유를 통한 불교복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금까지 조사되지 않았던 각 종단 사찰의 복지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교계의 사회복지 관련 법인, 학교, 각 기관·시설 등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종사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인명현황을 수록함으로써 사찰간·종사자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람은 개요·기초조사 결과보고·불교사회복지현황·사찰별 복지활동 현황·종사자 인명현황·기획논집·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교사회복지현황에는 사회복지법인·재(사)단

법인·복지단체·아동·청소년·장애인·부랑인·여성·노인·근로·장의복지시설 등과 종합사회복지관·상담기관·자원봉사기관·사회체육시설·연구기관 등 모두 3백91개 시설 및 단체에 대한 개요 및 설립목적, 시설현황 및 주요사업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기획논집에는 불교복지 전문가 5인의 관련논문이 실려 있으며, 부록에는 학위 및 일반논문 등의 불교사회복지 자료목록과 시도별 주소록, 불교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등을 실고 색인목록도 추가해 사용자들의 편의도 높고 있다. 한영우 기자

정대스님 KCRP회장직 제의 '사양'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직을 제의받았으나 고사했다. 정대스님은 2일 KCRP 변진홍 사무처장(인천가톨릭대 교수)으로부터 정임 고산스님에 이어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더 훌륭한 분들이 맡아야 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따라 변 사무처장은 한차례 더 요청하고, 그때도 고사할 경우 회장단과 상의해 다른 분에게 부탁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11월 24일 KCRP 교문인 김동환목사의 같은 제의에 대해서도 고사한 적이 있다. 정성운 기자

사령
 命 일본지사장
 최현규
 1999년 12월 1일자

현대만평

소외...

해인승가대 퇴방학인

편입학 제재하기로

조계종교육원, 강원에 시달

조계종 교육원은 9일 면학풍토 훼손, 사미와 학인 신분을 망각한 행동 등으로 11월7일자로 해인승가대학에서 퇴방 조치된 학인들에 대한 편입학 제재조치

를 담은 지침을 전국 강원에 시달했다. 교육원이 강원 학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기본교육 정상화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공문은 12월 3, 9일 교무회의 결의로 전 해인승가대학 사교반 학인(17명)의 타 승가대학 편입학을 제재하고, 승가대학 제29조(수업일수), 제37조(편입학 시기), 제39조(전학)에 의

거해 99학년도 사교반 및 2000학년도 대교반 편입을 불허하며, 99학년도 사교반 및 2000학년도 사교반 편입에 한해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교육원은 총무원 호법부와 함께 연말까지 사미의제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미착용에 비승에 대한 구속제 수지 자격 제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人事말씀

大韓佛敎 曹溪宗 元老이신 東谷堂 日陀 大宗師의 永訣式을 佛紀 2543年 12月 5日(陰 10月 28日) 宗正猊下께서 친히 참석하신 자리에서 敎團의 元老·大德스님과 在家佛子 그리고 各界 四部大衆을 모시고 宗團의 元老會議葬으로 嚴肅히 奉行하셨습니다. 公私간 多忙하심에도 不拘하시고 參席해 주신데 대하여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慌忙中 우선 紙面으로 심심한 感謝의 人事를 드리오니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四十九齋 안내

東谷堂 日陀 大宗師 四十九齋를 다음과 같이 奉行하오니 두루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일시	전화번호
1재 은해사	12월 5일(음 10.28) 사시	(0563)335-3318
2재 해인사 지족암	12월 12일(음 11. 5) 사시	(0599)932-7302
3재 통도사	12월 19일(음 11.12) 사시	(0523)382-7182
4재 수덕사	12월 26일(음 11.19) 사시	(0458)337-6613
5재 송광사	새해 1월 2일(음 11.26) 사시	(0661)755-0107
6재 약천사	1월 9일(음 12. 3) 사시	(064)738-5000
7재 해인사	1월 16일(음 12.10) 사시	(0599)931-1001

◎문의 : 경북 영천시 청동면 치일리 은해사 중무소 ☎ (0563)335-3318~9 / FAX (0563)335-0293

佛紀 2543年 12月 7日

東谷堂 日陀 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葬儀委員長 탄성 護 喪 도견 指導委員長 정대 합 장
 執行委員長 법타 門中代表 화산 門徒 一同